

민주노총 30주년,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의 계기로 삼자!

민주당에 의존하는 민주노총 투쟁의 한계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총궐기를 연속 조직하며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본래 과제인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위해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또다시 무산된 상황을 돌아보면,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노조법 개정을 정치전략에 동원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과 기존 법에 위배되며,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러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기업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시도했던 의도 역시 정치전략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에는 노조법 개정에서 소극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극적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작년 9월,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를 유도해, 노조할 권리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거부권 패키지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시키도록 압박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정치전략에 활용되면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할 '기회'를 엿봤으나, 노조법 개정 운동은 결국 민주당 정치투쟁의 '불쏘시개'로 동원되어 실패하게 됐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자

노동운동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전략이었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지체되고 있고,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날 민주당에 의존한 투쟁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일정에 의존하고 일부 상층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도되는 방식이, 민주노총이 스스로 대중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노총이 집중하고 있는 정치투쟁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운동이 독자적인 전략 없이 거대 야당의 반정권 투쟁에 끌려간다면, 사회적 표상을 잃고 결국 퇴보할 것이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북한은 침략전쟁 가담하지 말라

파병과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 말라

1만여 명.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하여 곧 실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의 숫자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판단으로 이들은 곧 낮은 타국에서 전장의 이슬로 목숨을 잃을 처지에 처했다. 북한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파병을 결정하자 “동족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미국의 돌격대로 희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를 무조건 견어치우라”고 했다.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 읽으면 바로 그것이 오늘 북한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다. 북한은 파병으로 파렴치한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겠다는 반인륜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협력과 멀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10월 29일과 10월 31일, 러시아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러시아가 노골적인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승인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북·러 협력이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신호다.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까지 침략전쟁 승리를 위한 카드로 동원하는 러시아와 핵무기 강화를 위해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사태를 혹자가 말하듯 “남의 나라 전쟁”이라 칭하며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운동은 북한의 전쟁범죄 가담과 북·러 핵동맹 위협을 직시해야

일각에서는 북한의 파병을 가짜뉴스나 과장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의 파병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임을 무시하면서, 국내 정쟁을 위한 논거로만 이용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러시아와, 이에 파병으로 동조하는 북한의 행태를 사회운동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

북한은 파병을 포함한 일체의 침략전쟁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러시아는 침략공격을 멈추고 주변국 동원과 핵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다!



- ◇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정세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 ◇ 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입장과 과제, 방향과 정책에 대해 연구합니다.
- ◇ 사회운동·노동조합의 교육·토론에 활용할 교육자료를 정선하여 전달합니다.

기관지 정기구독 안내

《계간 사회진보연대》는 1년에 4회 발행됩니다. (3·6·9·12월)

01. CMS 정기출금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www.pssp.org)에서 구독 신청 신청 이후 첫 발행월부터 3개월 마다 15,000원씩 출금

02. 무통장 입금
전화 (02-778-4001) / 이메일 (pssp4001@gmail.com) 로 신청 후 구독료 송금

구독료:
1년 (60,000원), 2년 (110,000원), 3년 (150,000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08-155464-04-026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웹진, <사회운동포커스>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정세, 운동 전략, 국제 이슈, 투쟁현장 소식을 전달합니다.

- ◇ [지상중계] 체제전환연석회의(준) <민주노총 30주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2024. 10. 29.)
- ◇ [정세초점]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4.10. 24.)
- ◇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동조한 '노조할 권리'의 실패 (2024. 10. 22.)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텔레그램 | t.me/socialmovementfocus

▶ 오른쪽 QR 코드 스캔으로 텔레그램 채널 구독!

